

본 자료는 법무부에서 외주 사업을 통해 번역한 문서로, 법무부의 공식 입장과 무관하며 인용이 불가합니다. 정확하고 상세한 이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출처원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도 2024년 인권 보고서

총괄 요약

북동부 마니푸르(Manipur)주 내 기독교계인 쿠키(Kuki)족과 힌두교계가 주류인 메이테이(Meitei)족 간의 민족 갈등이 심화되면서 인권 침해 사례가 잇따라 발생했다. 중앙정부군이 양 진영 사이에 완충지대를 유지했으나, 언론 보도에 따르면 10월 29일 기준 민간인 48명이 사망하는 등 분쟁이 계속됐다. 경찰은 정부의 갈등 해결 실패를 규탄하는 학생 주도 시위를 진압하기 위해 전기충격기와 최루탄을 사용했다. 정부는 시위가 발생하자 주 일부 지역에 무기한 통행금지령을 내렸다. 마니푸르주의 인도주의적 구호 및 재건 노력의 실효성을 감독하도록 대법원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위원회는 관련 업무를 지속했다.

중대한 인권 문제로는 자의적 또는 불법적 살인, 실종, 고문, 잔혹하고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 자의적 체포 또는 구금이 지적됐다. 또한 개인에 대한 초국가적 탄압, 무력 충돌로 인해 발생한 심각한 인권 유린, 마오이스트 비국가 집단에 의한 불법적인 아동 모집 또는 사용에 관한 보고가 있었다. 이 밖에도 언론인에 대한 폭력 및 보복 위협, 부당한 체포나 기소, 검열 등 표현과 언론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제한, 그리고 강제 낙태나 강제 불임시술 사례 등에 관한 신빙성 있는 보고가 확인됐다.

정부는 인권 침해를 저지른 공무원을 적발하고 처벌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조치를 거의 취하지 않았다.

잠무 카슈미르(Jammu and Kashmir, J&K)와 북동부 지역, 마오주의 테러 피해 지역의 테러리스트들이 인권 침해를 자행했으며, 해당 세력은 9월 10일 기준 잠무 카슈미르(J&K)에서 보안 요원 20명과 민간인 18명을 살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공동체 간 폭력에 대한 보고도 잇따랐으나, 당국은 테러 관련 인권 침해 사건을 수사하고 기소했다.

제1절 생명권

a. 초법적 살인

당해 연도에 정부나 그 소속 요원에 의한 자의적 또는 불법적 살인 사례가 잇따라 보고되었다. 언론은 경찰과 보안군이 피의자를 사살한 뒤, 이를 소위 '위장 교전 사살(encounter killings)'로 조작하여 정당방위인 것처럼 위장했다고 보도했다. 국가인권위원회([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NHRC)의 집계에 따르면, 8월 기준 경찰과의 교전 과정에서 총 85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찰이나 교도관이 수감자를 살해했다는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으며, 이러한 사건 중 일부는 자살이나 자연사로 허위 분류되는 사례도 있었다. 국가인권위원회(NHRC)는 8월까지 보고된 사법 구금 중 사망 사례가 총 1,372건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지난 3월 31일, 비하르(Bihar)주 파트나(Patna)에서 경찰이 지테시 쿠마르(Jitesh Kumar)를 고문하여 구금 중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대해 6월 28일 언론은 비하르주 인권위원회가 주정부를 상대로 유족에게 150만 인도 루피(약 1만 8,000달러)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관할 경찰서장에 대한 감찰 및 해당 경찰 인력에 대한 법정 모독 혐의 고발을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다만 비하르 주정부가 이러한 권고 사항을 실제로 이행했는지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인도군과 주 보안군, 준군사조직은 북동부 접경 지역 및 잠무 카슈미르(J&K)에서 테러 집단과 교전을 벌였으며, 북부·중부·동부 지역에서는 마오이스트 반군과 대치했다. 해당 지역의 전반적인 폭력 수위는 낮아지는 추세이나, 육군과 보안군은 여전히 북동부를 비롯한 주요 지역에 주둔 중이다. 이 과정에서 보안군에 의한 초법적 살인 의혹이 제기되었고, 일부 인권 단체는 경찰이 시신 인도를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당국이 군의 구금 중 사망 사고를 국가인권위원회(NHRC)에 보고하도록 강제하지 않아, 관련 인권 침해에 대한 수사과 기소는 극히 미미한 수준에 그쳤다.

정부 보안군이 테러 의심 단체를 소탕하는 과정에서 민간인이 희생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나, 정부는 이를 작전 수행 중 발생한 비의도적 사고라고 해명했다.

2023년 5월 발발한 마니푸르주의 다수 메이테이족과 소수 쿠키족 간의 유혈 충돌은 6월 이후 세력이 다소 약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9월 상순에만 종족 간 충돌로 최소 10명이 목숨을 잃었으며, 9월 10일 인도 당국은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학생 시위가 격화되자 주 전역에 무기한 통행금지령을 선포했다. 이번 갈등은 발생 이래 220명 이상의 사망자와 약 6만 7,000명의 이재민을 낳는 비극을 초래했다. 언론에 따르면 9월 기준 중앙무장경찰대(Central Armed Police Forces, CAPF) 198개 중대와 육군 부대 140개 중대가 현지에 급파되어 배치된 상태이다.

2023년 대법원은 마니푸르 주정부의 치안 유지 실패를 강력히 질타하고, 구호 지원 및 파괴된 주택과 종교 시설의 복구를 전담하기 위해 퇴직 판사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신설했다. 대법원은 지난 8월 해당 위원회의 권한을 재확인한 데 이어, 12월에는 그간의 재건 지원 성과와 인도주의적 활동 내역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명령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10월 4일, 차티스가르(Chhattisgarh)주 보안 당국은 작전을 통해 마오이스트 반군(낙살라이트) 31명을 사살했으며, 이는 주 역사상 일일 사상자 수로는 최대 규모이다. 10월 7일 집계 기준, 올해에만 해당 지역에서 반군 185명, 보안 요원 15명, 민간인 47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차티스가르의 부족 권리 활동가들은 보안 당국이 민간인을 살해한 뒤 반군으로 둔갑시키는 관행이 빈번하게 자행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남아시아 테러리즘 포털(South Asia Terrorism Portal)의 보도 자료 분석에 따르면, 9월 8일 기준 테러 의심 세력에 의한 살인 사건은 193건이며 이 중 45명은 보안 요원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반면 보안군에 의해 사살된 테러리스트 및 반군, 극단주의자 등은 총 262명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b. 인구 통제 관련 강제 조치

정부 당국이 주도한 강제 낙태 및 비자발적 불임시술 사례가 보고되었다. 특히 저소득층이나 하위 카스트 출신 여성들은 배우자와 가족으로부터 난관결찰술 또는 자궁적출술을 받도록 강요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악습의 만연 정도는 지역마다 차이가 있었다. 한편, 정부는 자발적 불임시술 등 피임법에 동의한 여성에게 임금 손실분, 교통비, 의약품 및 처치 비용, 사후 검진비 등을 금전적으로 보상했다. 여타 가족계획 수단을 활용하는 데 공식적인 제한은 없었으나, 최근 피임 선택권을 확대하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체 피임법의 높은 비용과 낮은 접근성 탓에 자발적 불임시술이 여전히 주요 수단으로 이용되었다.

두 자녀 이상 가구에 불이익을 주는 정책과 지침은 비록 광범위하게 시행되지는 않았으나, 여러 주에서 여전히 그 효력을 유지하고 있었다. 일부 주에서는 두 자녀 이하 가구의 성인에게만 공공 부문 일자리와 정부 보조금을 우선 배정하는 할당제를 실시했다.

상당수의 주에서 가족계획의 일환으로 여성 불임시술을 장려하고 있는데, 이는 시술의 위험성과 기준 미달의 처치를 받을 가능성을 높였으며, 결과적으로 비영구적 피임법을 이용할 기회를 제약하는 원인이 됐다.

보건 서비스 행정은 주정부의 고유 권한이므로 중앙정부가 각 주의 공중보건 정책을 직접 규제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일부 지역 당국은 보건 인력과 의료 시설에 불임시술 건당 수수료를 지급하거나 여성 불임시술 할당량을 강제로 부과하기도 했다. 특히 소외계층과 저소득층 여성을 대상으로 한 공공 의료 서비스의 부실함은 이들이 적절한 치료를 기피하게 만드는 주요 원인이 됐다. 정부 주도 계획에 힘입어 의료기관 내 분만율은 크게 상승했으나, 정작 보건 시설은 밀려드는 환자로 과부하 상태이며 의료 장비와 물자 공급 역시 지속적으로 부족하다는 보고가 잇따랐다.

지난 3월, 뉴욕타임스(The New York Times)는 마하라슈트라(Maharashtra)주의 사탕수수 수확 현장에서 근무하는 여성 노동자들이 경제적 압박에 못 이겨 자궁적출술을 받게 됐다고 보도했다. 해당 기사에 따르면, 노동자들은 월경을 소득 활동에 지장을 주는 장애 요소로 간주하고 있었다. 여기에 위생 시설 미비로 인한 감염 문제와 생식 보건 서비스의 부재가 겹치면서 많은 여성이 결국 자궁적출술을 선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인권 활동가들은 일부 사설 의료진이 영리 목적으로 수술을 권유하거나, 수술을 거부할 경우 암 발생 위험이 크다는 허위 정보를 제공하여 시술을 유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사에 따르면, 정부 조사 결과 비드(Beed) 지구 사탕수수 산업 종사 여성 노동자 8만 2,000여 명 중 약 20%가 자궁적출술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마하라슈트라 주정부는 해당 지역의 비정상적인 수술률을 낮추기 위해 정부 승인 후 시술을 의무화하고, 사탕수수 사업 부문 여성 노동자에 대한 건강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대책을 마련했다. 주정부 관계자는 이러한 조치 시행 이후 자궁적출술 시행 비율이 2019년 이전 대비 약 20% 감소했다고 밝혔다.

제2절 자유

a. 언론의 자유

개인들은 온라인 플랫폼, 방송, 인쇄 매체 등을 통해 공개적·사적으로 정부를 비판하며 표현의 자유를 행사했다. 그러나 정부나 친정부 성향의 인사가 정부에 비판적인 언론 매체에 압력을 가하거나 괴롭혔다는 의혹이 다수 제기되었다. 실제로 정부 비판적 견해를 표명한 언론 단체와 기자가 체포, 위협 또는 협박을 당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또한 범죄 조직을 포함한 비국가 행위자들이 정부를 비판하거나 부패를 폭로한 기자를 살해하고, 폭력과 협박을 가했다는 보고도 잇따랐다.

현행법은 종교적 감정을 저해하거나 집단 간 적대감을 조장하는 표현을 금지하고 있으며, 당국은 해당 조항을 근거로 인쇄물·방송·디지털 스트리밍 플랫폼 등 미디어와 도서의 출간 및 유통을 제한했다.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 HRW)의 2024년 세계 보고서에 따르면, 당국은 정치적 목적을 띤 기소와 위협을 수단으로 삼아 시민사회 활동가, 독립 언론인, 정치적 반대 세력의 비판 여론을 억제하려는 시도를 강화했다. 또한 당국이 잠무 카슈미르(J&K) 지역에서 표현의 자유와 평화적 집회 등 기본권을 지속적으로 제한하고 있다는 점도 해당 보고서에 명시됐다.

일부 비정부기구(NGO)는 선동법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7월 발효된 새로운 법률인 「인도 신형법(Bharatiya Nyaya Sanhita)」은 기존의 선동 혐의를 폐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리 독립, 무장 반란, 분리주의 또는 전복 활동을 선동하거나 시도하는 행위, 그리고 국가 주권이나 통일성을 위협하는 유포 행위 등에 대해서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할 수 있는 새로운 처벌 규정이 마련되었다. 다만, 이 법은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정부 정책의 변화를 이끌어낼 목적으로 불만을 표출하는 행위는 범죄로 간주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2023년 11월, 로이터(Reuters) 통신은 인도 기업 '아핀(Appin)'이 전 세계 고객의 의뢰를 받아 야당 지도자, 기업 경쟁사, 변호사, 자산가 등을 감시하는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아핀 측은 델리 지방법원에 로이터와 해당 기자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으며, 로이터가 전 세계적으로 해당 기사를 삭제하고 관련 보도를 중단하도록 하는 광범위한 임시 금지 명령을 받아냈다. 로이터는 당해 연도에 델리 고등법원에 항소했으며, 해당 소송과 항소 건은 모두 연말까지 법원에 계류된 상태였다.

물리적 공격, 구금, 압력

당해 연도 동안 휴먼라이츠워치(HRW)는 최소 34명의 기자가 공격을 받고 5명이 체포되었으며, 최소 175개의 소셜미디어 계정과 웹 링크가 차단되었다고 보고했다. 언론인과 비정부기구(NGO)는 지방 및 중앙정부 관리들이 신체적 가해와 공격, 언론사 소유주에 대한 압력, 광고주 표적 수사, 무고성 소송 조장, 통신 차단, 이동의 자유 제한 등을 통해 언론 매체를 위협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NGO들은 정부에 비판적인 기자들을 압박하기 위해 형사 기소와 수사 절차가 악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경없는기자회(Reporters Without Borders)는 '2024년 세계 언론자유 지수'를 통해 인도를 "언론인에게 있어서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국가 중 하나"로 규정했으며, 경찰, 정치 활동가, 범죄 조직, 지방 관리들에 의해 매년 평균 3~4명의 기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살해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에 비판적인 기자들은 정당과 연계된 비국가 행위자들로부터 온라인 괴롭힘, 협박, 물리적 폭행은 물론 형사 기소와 자의적 체포에 일상적으로 노출되어 있다. 아울러 잠무 카슈미르(J&K) 지역의 기자들이 경찰과 준군사조직에 의해 빈번하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으며, 일부는 확정판결 없이 수년간 구금되어 있다는 점도 언급되었다.

지난 5월 13일, 기자인 아슈토시 스리바스타바(Ashutosh Srivastava)가 우타르프라데시(Uttar Pradesh)주 자운푸르(Jaunpur) 인근에서 신원 미상의 가해자들에게 총격을 받아 사망했다. 해당 사건이 그의 취재 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으나, 스리바스타바는 생전에 소 도축 실태 보도로 신변의 위협을 느껴 경찰에 보호를 요청한 전력이 있었다.

정부, 군대, 정보기관, 경찰, 범죄 조직, 무장 극단주의자 또는 반군 세력에 의한 검열

언론을 비롯한 기타 매체는 편집의 독립성을 유지하기도 했으나, 정부는 광범위한 공익과 국가 이익 보호 조항을 근거로 보도 내용을 제한했다. 또한 언론사들은 정부의 보복을 우려하여 스스로 보도 수위를 조절하는 자기검열을 시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월 12일, 정보방송부(Ministry of Information and Broadcasting)는 「정보기술법(Information Technology Act)」을 근거로 뉴스 잡지 '더 캐러밴(The Caravan)'에 잠무 카슈미르(J&K) 내 군부대의 민간인 고문 의혹 기사를 삭제하라고 명령했다. 해당 잡지사는 24시간 이내에 웹사이트에서 기사를 삭제하지 않을 경우 웹사이트 전체가 폐쇄될 수 있다는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정부는 AM 라디오 방송을 독점하여 국영 방송사인 '올인디아 라디오(All India Radio)'를 통해서만 방송이 송출되도록 제한했으며, FM 라디오 허가 역시 오락과 교육 콘텐츠로만 한정했다. 주정부 관리들은 선동적이거나 종파적 또는 종교적 긴장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특정 도서의 수입이나 판매를 금지했다.

b. 근로자 권리

결사의 자유 및 단체교섭권

현행법은 노동조합 결성 및 가입 권리와 단체교섭권을 명시하고 있으나, 고용주에게 노동조합을 승인하거나 단체교섭에 응해야 할 법적 의무를 부과하지는 않았다. 이에 따라 고용주가 노동조합 인정을 거부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했다. 노동조합이 법적 지위를 확보하려면 사업장 내 최소 100명의 조합원 또는 전체 근로자의 10%(둘 중 적은 수 기준) 이상을 확보해야 하며, 특히 단체교섭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전체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조합원으로 포섭해야 했다. 시킴(Sikkim)주의 경우 노동조합 등록 시 주정부의 사전 허가를 받도록 규정했으며, 일반 시민이 노조 등록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도 존재했다.

법률상 파업권이 보장되어 있으나 일부 직종의 근로자에게는 그 권리가 제한되었다. 단체교섭을 통해 고충을 해결하려면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규정된 조정 절차 외에도 의무고충처리위원회(compulsory grievance redressal committee)를 반드시 거쳐야 했다. 특히 수출가공지역(EPZ)은 '공익사업(public utility)'으로 지정되어 파업 시 45일 전 사전 예고가 의무화되었다. 또한 법률은 정부에 국영기업의 파업을 금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으며, 주별로 정의가 상이한 '필수 산업'에 대해서는 강제 중재도 허용했다.

법률은 노동조합 활동에 따른 차별과 합법적 파업 참여자에 대한 보복 행위를 금지하고, 부당하게 해고된 노조원의 복직을 규정했다. 노동조합 지도자들은 대체로 정부나 고용주의 위협과 폭력으로부터 자유롭게 활동했으며, 정규 산업 부문에서 고용주가 노조와의 교섭을 거부하는 사례는 드물었다. 노동법의 집행 수준은 주정부와 산업 부문에 따라 편차를 보였으나, 일반적으로 규모가 큰 정규 산업 부문에서 법 집행이 더욱 원활하게 이루어졌다.

당국은 산업 현장에서 합법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억압하거나 방해한 개인을 기소하고 처벌했다. 다만 「노동조합법(Trade Union Act)」 자체에는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명시되지 않아, 주로 민사 절차를 통해 사건을 처리했다. 처벌 수위는 차별 등 시민권 침해와 관련된 타 법령의 처벌 기준과 상응하는 수준이었으며, 실제로 위반자에 대한 처벌이 내려진 사례도 있었다.

노동 분쟁 해결을 위한 전문 노동법원이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리 절차의 장기 지연과 미결 사건의 과도한 적체 현상이 고질적으로 지속됐다.

고용주들은 대규모 정규 산업 부문에서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을 대체로 존중했으나, 경제적 비중이 큰 비공식 부문에서는 이러한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았다.

다만 자영여성협회(Self-Employed Women's Association)와 같은 회원 기반 조직은 비공식 부문 노동자들을 조직화하여 적정 임금과 제품 가격을 보장받도록 지원했다. 깃(gig) 근로자와 플랫폼 노동자들 역시 전인도깃근로자노조(All India Gig Workers' Union) 등을 결성하여 임금 인상과 공정한 평가 제도 개선, 계정 유지권 보장 등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다.

전체 노조원의 약 80%는 5대 주요 노동조합 연맹 중 한 곳에 소속된 것으로 추산된다. 이들 노동조합은 정부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했으나, 5대 연맹 중 4개 조직은 주요 정당과 정치적으로 긴밀히 연계되어 있었다.

지난 9월, 타밀나두(Tamil Nadu)주 소재 삼성전자의 가전 공장 파업이 4주 차에 접어들자, 경찰은 가두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근로자와 노조원 약 600명을 구금했다. 1,000명 이상의 근로자들은 임금 인상과 노조 인정을 요구하며 시위를 지속하다 10월 14일 파업을 중단했다.

주 및 지방 당국은 노동조합 등록을 방해하거나 독립적인 노조 활동을 탄압하고,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여 강제 중재 명령을 내리는 등 공권력을 행사하기도 했다. 노동계는 일부 고용주들이 기존 노동조합의 승인을 거부하는 대신, 독립 노조의 조직화를 저지할 목적으로 자체적인 ‘근로자위원회’나 어용 노조를 설립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수출가공지역(EPZ)은 근로자를 주로 단기 계약직으로 채용했으며, 외부인의 출입을 엄격히 제한하여 노동조합 조직가들의 접근을 차단했다.

강제노동 또는 의무노동

미국 국무부(United States Department of State)의 연례 *인신매매 보고서*(*Trafficking in Persons Report*) 참조. <https://www.state.gov/reports/2024-trafficking-in-persons-report/>.

적정한 근로 조건

임금 및 근로시간 관련 법률

최저임금과 근로시간은 주정부별 지침을 따랐다. 일일 최저임금은 지역마다 차이가 있었으나, 공식적인 빈곤선 추정 소득보다는 높게 책정되었다. 또한 주정부는 농업 근로자를 위해 별도의 최저임금 기준을 마련했다.

현행법은 일일 최대 8시간, 주당 48시간 근무를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4시간 근무 시 최소 30분의 휴식 시간을 보장하고 초과근무에 대한 할증 임금 지급을 명시했으나, 유급 휴일 제공은 의무 사항에 포함하지 않았다. 아울러 강제적인 초과근무를 금지하고 그 총량을 제한하는 규정도 마련했다. 이러한 법규는 대체로 체계화된 정규 부문 산업에서는 준수되었으나, 비조직화된 비공식 경제 부문에서는 집행이 미흡했다.

산업안전보건

법률은 화장실, 구내식당, 의료 및 환기 시설 구비 등 안전한 근로 조건 조성을 의무화하고 있다. 연방법을 통해 산업안전보건(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OSH)의 기본 기준을 설정하고, 주정부는 이에 더해 지역별 세부 규정을 시행했다. 정부가 설정한 안전 보건 기준은 국내 주요 산업 환경에 적합한 수준이었다.

다만 소규모 기초 기술 공장의 경우 근로자들이 위험한 작업 환경에 빈번히 노출되었으며, 특히 미등록 외국인 근로자들은 기본적인 산업안전보건(OSH) 보호 체계에서 제외되었다. 많은 근로자가 해고 위협 탓에 건강과 안전을 위협받는 열악한 환경에서도 자발적으로 벗어나지 못하는 처지에 놓여 있었다.

지난 3월 20일, 미국 기업책임연구소(Corporate Accountability Lab)는 안드라프라데시(Andhra Pradesh)주에서 3년간 수행한 실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인도 새우 양식 산업의 부당한 근로 환경을 고발하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해당 보고서는 강제노동 징후와 더불어 위생 시설이 전무하고 과밀한 기숙사의 열악한 환경, 임금 체불, 계약업체와의 채무 관계에 기반한 노동 약정, 공장 감사 및 제품 인증서 위조, 생산량 증대를 위한 미인증 시설 가동 등의 사례를 명시했다. 이에 대해 인도 수산물수출협회(Seafood Exporters Association of India)는 협회와 노동 감독관이 모든 가공 현장의 노동 조건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해당 내용을 반박했다.

임금, 근무시간, 산업안전보건(OSH) 규정의 집행

주정부는 최저임금 준수, 초과근무 수당 지급, 산업안전보건(OSH) 관련 법률의 집행을 책임졌다. 그러나 감독관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노동법을 실효성 있게 집행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감독관은 무작위로 선정된 사업장에 대해 예고 없는 불시 점검을 실시할 권한을 보유했으나, 벌금 등 제재 처분은 고용주에게 1차 경고를 하고 법 준수를 위한 유예 기간을 부여한 후에만 가능했다. 특히 건설 및 화학 산업 부문에서 산업안전보건 기준 위반이 빈번했음에도 전반적인 집행은 미흡한 수준이었다. 관련 법 위반 시 처벌 수위는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등 유사 범죄의 처벌 기준에 준했으며, 실제 처벌로 이어진 사례도 존재했다.

하수관이나 정화조의 오물을 인력으로 직접 제거하는 '수동 분뇨 처리(manual scavenging)' 관행은 법으로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 하지만 인권 활동가들은 이러한 악습이 인도 내 여러 지역에서 여전히 만연해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7월 31일 기준 인도 전역 766개 지역(district) 중 732개 지역에서 수동 분뇨 처리 관행이 근절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시민사회단체의 집계 결과, 2월 1일부터 7월 23일 사이에만 43명의 작업자가 해당 업무 중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제노동기구(ILO)는 지난 5년간 이 작업으로 인해 사망한 인원이 약 347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지난 7월, 마하라슈트라 주정부는 1993년 이후 주 내에서 발생한 수동 분뇨 처리 관련 사망자 81명의 유가족에게 보상금 지급을 완료했다고 봄베이 고등법원에 보고했다. 주 당국은 관내 36개 지역 모두에서 해당 관행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공식 선언했다.

2021~2022년 노동고용부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재택근로자나 자영업자 등을 포함한 '비조직 부문 근로자'는 약 3억 8,00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된다. 임금, 근로시간,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법률은 이러한 방대한 비공식 부문에는 적용되지 않았으며, 정부 역시 이 분야의 노동법 집행을 방치했다. 결과적으로 전체 근로자의 약 90%를 차지하는 비공식 부문 노동자들은 「공장법」 등 현행 법령의 보호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다만 노동고용부의 전자 노동(e-shram) 포털에는 보건 및 사회보장 혜택 대상자인 비조직 근로자 3억 명 이상이 등록되어 관리를 받고 있다.

8월 21일, 안드라프라데시주 비사카파트남(Visakhapatnam) 인근 제약회사인 에시엔티아 어드밴스드 사이언시스(Escientia Advanced Sciences) 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하여 근로자 최소 17명이 사망하고 36명 이상이 부상을 입었다. 언론은 이번 사고가 화학 용매 누출로 인해 촉발된 것으로 보도했다. 주정부는 즉각적인 진상 조사를 명령하고, 사망자 유가족에게 각 1,000만 루피(약 12만 달러), 중상자에게 500만 루피, 경상자에게 250만 루피를 보상하도록 조치했다.

c. 실종 및 납치

실종

정부 당국 또는 그 대리인에 의한 강제 실종 사건이 보고되었다. 특히 경찰이 구금자에 대한 필수 체포 보고서를 누락하여 미해결 실종 사건을 야기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으나, 경찰과 정부 관계자들은 이러한 주장을 전면 부인했다.

지난 7월 의회 질의 응답 과정에서 정부가 제출한 국가범죄기록국(National Crimes Records Bureau, NCRB)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1년 사이 잠무 카슈미르(J&K) 지역에서 실종 신고된 여성과 소녀는 9,765명에 달했다. 이는 2016년부터 2019년 사이 보고된 3,300명에 비해 급격히 증가한 수치이다.

7월 26일, 유엔강제실종실무단(UN's Working Group on Enforced or Involuntary Disappearance)은 5월 10일 기준 인도의 미해결 강제 실종 사건이 총 444건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시민사회 단체들은 잠무 카슈미르 지역의 강제 실종 사례 및 신원 미상 집단 매장지에 대한 독립적인 조사를 촉구했으며, 실종자 가족들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사회적 낙인에 시달리고 있다고 보고했다.

기소 없는 장기 구금

법률상 임의적인 체포와 구금은 금지되며, 모든 개인은 법정에서 체포 및 구금의 적법성을 다툴 권리가 있다. 정부는 대체로 이러한 규정을 준수했으나, 임의 체포에 대한 보고가 지속적으로 접수되었으며 특히 경찰이 특별법을 악용해 사법 심사를 지연시킨 사례가 다수 확인되었다. 보고서들은 미비한 법적 보호장치와 업무 과부하 및 자원 부족에 시달리는 사법 시스템 탓에 장기 임의 구금이 여전히 심각한 문제로 남아 있다고 분석했다.

재판 없이 장기간 구금을 허용하는 여러 독소 조항이 존재하며, 당해 연도 발효된 신형법 역시 당국이 선동 혐의를 광범위하게 적용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었다.

법적 금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불법활동방지법(UAPA)」 등을 근거로 개인을 임의 체포하는 사례가 보고되었다. 특히 경찰이 신분을 밝히거나 체포영장 제시 없이 개인을 연행하여 심문했다는 증언이 잇따랐다. 가장 최근의 국가범죄기록국(NCRB) 자료에 따르면, 2022년 한 해 동안 「불법활동방지법」 위반으로 1,005건의 체포가 기록되었다. 그러나 경찰은 이 중 97%에 해당하는 979건에 대해 혐의를 기각했다. 법원은 39건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으나 이는 모두 과거에 발생한 사건들이었으며, 2022년 말 기준 3,177건의 재판이 여전히 계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결 구금은 자의적이고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때로는 유죄 확정 시 예상되는 형량을 초과하기도 했다. 국가범죄기록국(NCRB)은 2022년 12월 31일 기준 인도의 총수감자 수를 57만 3,000명으로 집계했으며, 이 중 75%인 43만 4,000명이 미결 수감자였다. 지난 2월 6일, 아자이 쿠마르 미슈라(Ajay Kumar Mishra) 내무부 국무장관은 하원 보고를 통해 2022년 말 기준 최소 1년 이상 수감 중인 미결 구금자가 13만 4,799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국가범죄기록국(NCRB) 자료에 따르면, 재판 대기 인원의 70%가 보석금을 마련하기 전까지 최소 3개월 이상을 수감 상태로 지냈다.

이러한 장기 미결 구금은 보석금 지불 능력이 없는 빈곤층과 소외계층에게 특히 더 가혹하고 불균형적인 영향을 미쳤다.

d. 종교의 자유 침해

미국 국무부(Department of State)의 연례 *국제 종교자유 보고서(International Religious Freedom Report)* 참조. <https://www.state.gov/religiousfreedomreport/>.

e. 인신매매

미국 국무부의 연례 *인신매매보고서(Trafficking in Persons Report)* 참조. <https://www.state.gov/reports/2024-trafficking-in-persons-report/>.

제3절 개인의 안전

a. 고문 및 잔혹하고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 또는 처벌

현행법은 고문 및 가혹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나, 정부 관계자가 이러한 관행을 자행했다는 신빙성 있는 보고가 지속적으로 접수됐다. 법률상 강제된 자백은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음에도, 유엔과 비정부기구(NGO)는 당국이 자백을 받아내기 위한 수단으로 고문을 활용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또한 당국이 금품을 갈취하거나 즉결 처벌을 내리는 과정에서 고문을 자행했다는 의혹도 제기되었다.

경찰의 구타가 구금 중 사망으로 이어진 사례도 보고되었으며, 휴먼라이츠워치(HRW)의 연례 세계보고서에 따르면 경찰은 허위 자백을 강요하기 위해 고문, 학대, 임의 구금을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사례에서는 경찰이 체포 사실을 공식 등록하지 않은 채 용의자를 구금하고, 음식과 물조차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다는 보고가 있었다. 국가인권위원회(NHRC)는 당해 연도 첫 8개월 동안 경찰 구금 중 107건, 사법 구금 중 1,372건의 사망 사례를 등록했다.

지난 4월, 언론은 육군이 2023년 12월 잠무 카슈미르(J&K) 푼치(Poonch) 지구에서 발생한 민간인 3명의 사망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조사 법정을 설치했다고 보도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고문으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다. 익명의 군 관계자에 따르면 관련자들에게 군사재판 등 징계 조치가 내려질 예정이라고 전해졌다. 3월에는 마노즈 신하(Manoj Sinha) 잠무 카슈미르 부지사가 유가족에게 정부 일자리 임명장을 전달하기도 했으나, 12월 2일 기준으로 실제 가해자들에게 어떠한 후속 조치가 취해졌는지에 대한 보고는 없었다.

경찰 구금 중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강간 등 경찰관이 연루된 성범죄 사례도 확인되었다. 정부는 국가인권위원회(NHRC)가 이러한 사건을 직접 조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했다. 국가범죄기록국(NCRB)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 사이 경찰 구금 중 강간 사건은 270건 이상 등록되었으며, 여성 인권 활동가들은 이를 법 집행 시스템 내의 인권 의식 부재와 책임성 결여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비정부기구(NGO)들은 국가인권위원회의 통계가 실제 경찰 구금 중 발생한 강간 건수를 과소 집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일부 피해 생존자들은 사회적 낙인과 가해자가 공권력이라는 점에 대한 보복 두려움 때문에 신고를 기피하고 있으며, 경찰 측에서 강간 사건의 접수 자체를 거부했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b. 아동 보호

아동 노동

미국 노동부의 *최악의 아동 노동 형태에 관한 조사 결과* 참조.
<https://www.dol.gov/agencies/ilab/resources/reports/child-labor/findings/>.

소년병

지난 9월 9일, 언론은 4월 16일 차티스가르(Chhattisgarh)주에서 전개된 경찰 작전 중 사망한 마오이스트 반군 29명 가운데 4명이 18세 미만 미성년자였으며, 다른 3명은 아동기에 가입하여 최근 18세가 된 것으로 밝혀졌다고 보도했다. 또한 당해 연도 발생한 약 40차례의 교전에서 사망한 153명의 마오이스트 중 아동이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 외에도 교전 중 아동이 사망한 사례가 3건 더 확인되었다고 전했다.

아동 결혼

법률상 혼인 가능 연령은 여성 18세, 남성 21세로 규정되어 있으며, 법원은 조혼이나 강제 결혼을 무효화할 권한을 보유한다. 그러나 당국은 관련 법을 일관되게 집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강간 피해자가 가해자와 강제로 결혼하게 되는 악습을 해결하는 데도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

국가범죄기록국(NCRB)에 따르면 2022년 접수된 아동 조혼 사례는 1,002건이었으나, 전문가들은 실제 발생 건수와 공식 보고된 수치 사이에 상당한 격차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은 아동 조혼 방지를 위해 각 주에 전담 조혼 금지 담당관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들은 조혼 사례 발생 시 개입하여 위반 사항을 기록하고 부모를 고발할 권한을 가지며, 위험에 처한 아동을 구출하여 지역 아동 보호 당국에 인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2023~2024년 아삼(Assam)주에서는 아동 조혼 사례가 81% 감소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유니세프(UNICEF)는 인도가 조혼 종식을 향해 진전을 이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 세계에서 아동 신부가 가장 많이 거주하는 국가라고 분석했다. 전 세계 아동 신부 3명 중 1명이 인도에 거주하고 있으며, 이들 중 절반 이상이 우타르프라데시, 비하르, 서벵골, 마하라슈트라, 마디야프라데시 등 5개 주에 집중되어 있다.

국가 법령은 최소 혼인 연령을 명시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각 주가 시민들이 종교법과 관습을 따르는 것을 용인해 왔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2월 우타라칸드(Uttarakhand)주는 국가 기준을 재확인하고 모든 형태의 아동 조혼을 금지하는 「통일민법(Uniform Civil Code, UCC)」을 제정했다. 해당 법안은 종교적 관습이나 특수한 종교법보다 우선하여 적용된다.

c. 난민 보호

인도에는 난민 정책을 규율하는 구체적인 법률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나, 유엔난민기구(UN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UNHCR)는 인도 정부 및 기타 인도주의 단체와 긴밀히 협력하여 난민, 귀환 난민, 망명 신청자 등 보호 대상자들에게 최소한의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유엔난민기구(UNHCR)의 6월 보고에 따르면, 인도 내에는 주로 미얀마, 스리랑카, 중국 출신의 난민과 망명 신청자, 그리고 이와 유사한 처지에 놓인 인원이 약 27만 3,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인도 체류 난민들은 외국인(비시민권자)에게 부여되는 기본적인 헌법적 보호를 받는다.

하지만 유엔난민기구(UNHCR)의 관리를 받는 많은 난민과 망명 신청자들은 장기 비자 발급이나 거주 허가 취득을 통해 체류 지위를 합법화하는 과정에서 점차 더 많은 장애물에 직면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2021년 2월 미얀마 군사 쿠데타 발생 이후, 4만 명 이상의 미얀마 난민이 인도 북동부 지역, 특히 미조람(Mizoram)주로 대피했다. 이들은 주로 친-조(Chin-Zo) 부족 출신으로, 미조람주의 주류인 미조(Mizo)족과 민족·문화적으로 유사하며 전통적인 유대감을 공유하고 있다.

난민 대다수는 구호 캠프나 공공건물에 수용되었으며, 상당수는 친척의 도움을 받거나 임대 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미조람 주정부와 교회 단체, 그리고 지역 최대 자원봉사 조직인 청년미조협회(YMA)를 비롯한 여러 NGO와 개인들이 이들에게 식량 등 구호물자를 제공하며 지원하고 있다.

1차 망명 제공

현행법상 망명이나 난민 지위 부여에 관한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정부 차원에서 난민에게 보호를 제공하는 공식적인 시스템도 갖추어지지 않았다.

법적 틀이 미비한 상황에서 정부는 국제법에 의거하여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사안별로 망명을 허가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임시방편적 접근은 난민 및 망명 신청자 집단에 따라 보호 기준이 달라지는 결과를 초래했다. 정부는 티베트와 스리랑카 출신 난민의 지위를 인정해 왔으며, 기타 국가 출신 개인에 대한 유엔난민기구(UNHCR)의 난민 지위 결정도 대체로 존중하는 편이었다.

d. 반유대주의 행위 및 반유대주의 선동

인도 내 유대인 공동체는 2020년 기준 약 4,800명으로 추산된다. 당해 연도 중 반유대주의 사건에 대한 보고는 없었다.

e. 초국가적 탄압 사례

정부가 시민사회 활동가, 인권 옹호자, 학자, 언론인 등 해외 거주 자국민(디아스포라)을 포함한 개인들을 대상으로 초국가적 탄압에 관여했다는 보고가 있었다.

역외 살인, 납치, 또는 폭력이나 폭력 위협

인도 정부는 타국 정부와 디아스포라 공동체, 인권 단체들로부터 보복을 목적으로 해외에 거주 중인 자를 살해하거나 폭력 및 위협을 가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지난 5월, 캐나다 당국은 2023년 9월 발생한 캐나다 시민 하르딕 싱 니자르(Hardeep Singh Nijjar) 살해 사건과 관련하여 인도인 남성 3명을 체포했다. 니자르는 인도 펀자브(Punjab)주의 분리와 독립 시크교 국가 건설을 주장해 왔으며, 인도 정부는 그를 테러리스트로 지정한 바 있다. 캐나다 정부는 체포된 이들이 인도 정부의 지시를 받는 청부 살해 조직의 일원이라고 주장했으나, 인도 정부는 어떠한 개입 의혹도 전면 부인했다.

10월 14일, 저스틴 트뤼도(Justin Trudeau) 캐나다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인도 정부 요원이 캐나다의 공공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는 활동에 관여해 왔으며, 현재도 개입하고 있다는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인도 정부는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10월 17일, 미국 법무부(U.S. Department of Justice, DOJ)는 뉴욕에서 미국 시민 구르파트want 싱 판눈(Gurpatwant Singh Pannun)을 살해하려는 음모를 지휘한 혐의로 인도 정부 직원 비카시 야다브(Vikash Yadav)를 청부 살인 및 자금 세탁 혐의로 기소했다고 발표했다. 해당 암살 음모는 미국 당국에 의해 사전에 저지되었다.

야다브와 공모한 혐의를 받는 니킬 굽타(Nikhil Gupta)는 앞서 기소되어 해당 혐의로 미국에 송환된 상태이다.

위협, 괴롭힘, 감시 또는 강압

인권 문제를 옹호하거나 연구·보도하는 시민사회 단체, 해외 거주 자국민(디아스포라), 학자, 언론인들은 위협과 괴롭힘, 자의적인 감시, 비자 거부 및 강압 등의 행위를 경험했다고 보고했다. 이들은 이러한 행위가 정부나 정부 연계 인물들에 의해 자행되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인도에 있는 가족과 친구, 동료들 역시 본인들의 인권 활동을 이유로 지역 당국으로부터 괴롭힘과 압력을 받았으며, 이러한 압박은 인권 활동을 위축시키고, 본인과 인도 내 가족에 대한 보복 우려로 인해 스스로 보도 수위를 조절하는 자기검열로 이어졌다고 전했다.

시민사회 활동가들은 인도 당국의 소셜미디어 계정 차단 및 삭제 요청, 음모론 유포 등을 인권과 종교의 자유 증진을 위해 활동하는 해외 디아스포라 활동가들에 대한 초국가적 탄압 사례로 지적했다.

2023년 12월, 워싱턴포스트(The Washington Post)는 '디스인포 랩(Disinfo Lab)'이라는 조직이 인도 정보기관 요원에 의해 운영되며, 해외의 정부 비판론자들을 조사하고 이들의 신용을 실추시키는 작업을 해왔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해당 기사는 디스인포 랩이 사실에 기반한 연구와 근거 없는 주장을 교묘히 결합하여, 인도계 미국인 인권 활동가 등 특정 개인들을 국가를 상대로 한 '음모'의 가담자로 묘사했다고 언급했다.

국제법 집행 도구의 오남용

지난 2월, 인터폴(Interpol) 규약 남용에 관한 언론 보도는 '청색 수배서(Blue Notices)' 발행과 여권 데이터베이스 등록 등 인도 정부의 인터폴 규정 위반 행위를 차단하는 일을 수행한 변호사의 인터뷰를 게재했다. 청색 수배서는 원래 범죄 관련 관심 인물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발행된다. 해당 기사에 따르면, 인도 정부는 국제법 집행 도구의 남용 혐의에 대해 '모호하고 입증되지 않은 주장'이라며 일축했다.

이동권 통제 시도

인도 정부가 해외 비판론자들에게 보복할 목적으로 이동의 자유를 통제하려 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여기에는 여행 서류를 무효화하여 그간 누려온 혜택을 취소하는 방식이 포함되었다.

프리덤 하우스(Freedom House)는 '2024년 이동의 자유에 관한 특별 보고서'를 통해 인도 정부가 여권뿐만 아니라 '인도 해외시민권(OCI)' 지위 취소 등 다양한 여행 서류를 규제 대상으로 삼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당국이 2014년부터 2023년 5월까지 언론인, 학자, 활동가 등을 비롯한 최소 102명의 OCI 소지 자격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지위가 취소된 개인은 향후 입국 금지 조치에 처할 위험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월, 인도계 영국 시민이자 웨스트민스터 대학교(University of Westminster) 교수인 니타샤 카울(Nitasha Kaul)은 카르나타카(Karnataka)주 국민회의당(Congress Party)의 초청을 받아 '헌법 회의'의 연사로 참석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벵갈루루(Bengaluru) 공항에 도착한 카울은 유효한 OCI 카드를 소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안 당국으로부터 입국을 거부당했다. 카울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자신이 공항 내 독방에 24시간 동안 억류되었으며, 어떠한 공식적인 설명도 듣지 못한 채 영국으로 강제 송환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외교부(MEA)는 외국인의 입국 허가 여부는 국가의 '주권적 결정' 사항이라고 답변했다.